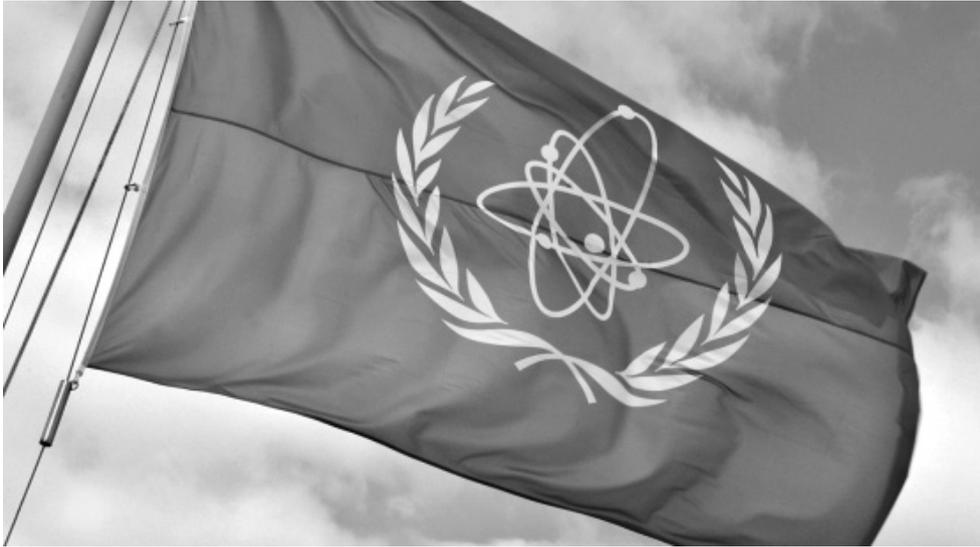


IAEA,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에 대한 검토와 감시 활동에 착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처리수의 방류와 관련하여 검토와 감시 활동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7월 8일 발표하였다.

처리수 방류 계획을 점진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 IAEA가 일본 정부와 본 기준서를 통해 틀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처리수의 방류 이전과 중간, 그리고 이후의 절차에 IAEA가 참여하여 방류 결정이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2021년 4월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는 IAEA에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따른 자국의 계획과 활동의 점검과 환경 감시활동에 대한 지원, 참여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2년 이내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를 원하며, 전체 방류작업에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AEA는 일본 정부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시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한 IAEA의 Rafael Mariano Grossi 사무총장은 “IAEA의 전문가들은 세계인의 눈높이에서 해양 방류가 안전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 이로써 일본과 인접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처리수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rossi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체 작업에 필수적인 처리수 보관 탱크가 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수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은 물론, 국제 관행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준서는 Lydie Evrard IAEA 원자력안전 및 안보부 사무차관과 Takeshi Hikihara 주빈국 제기구 일본대표부 영사가 대표로 서명하였다. 기준서는 IAEA의 지원목적, 시행방안 및 조직배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IAEA는 자체 안전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세부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최초 대표단은 연중 일본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합의한 기준서에 따라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 중 아래 내용을 포함한 주요 안전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 처리수의 방사선학적 특성
 - 처리수 방류 과정 중 안전 관련 사항
 - 방류와 관련한 환경 모니터링
 - 인간과 환경 보호 보장과 관련한 방사선학적 환경 영향 평가
 - 승인, 검사, 검토 및 평가를 포함한 규제 통제
- IAEA 사무국의 권한 아래 해당 지역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의 저명한 전문가 중 선정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일본 정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선 모니터링, 교정조치,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등 여러 분야에서 사고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IAEA의 안전 검토는 이온화 방사선의 악영향으로부터 공중과 환경을 보호하는 전 세계적인 자체 안전기준에 기반하고 있다. **KMIF**

〈07-08〉

IAEA